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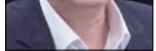
# 민선 9기 조기 정착 · 핵심 사업 추진

도, 13~16일 도정 주요일정 공개... 이원택 도지사 도정운영 방향 직접 설명 · 상상혁신센터 협약식 등

전북특별자치도 이철규 대변인(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정례 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 도정 주요 업무 추진 일정과 현안 대응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9기 출범 100일 동안 집중 추진할 중점 과제와 도정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14일에는 도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및 확장 투자 협약이 진행된다. 한솔케미칼 약 1,000억원, 동원로엑스 약 77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6 성장사다리 기업 리더스 혁신포럼'도 개최된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50개 성장 사다리 기업을 포함해 도내 180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기업 성장 단계별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어 오후 1시에는 전주대학교에서 '하우우우 미래캠프' 발대식이 개최된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에게 기업 인턴십을 제공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진로 탐색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인증 참여자에게 개인은 2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 단체는 10만 원 상당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민과 국민의 관심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15일에는 400억원 규모의 방산 클러스터 선정에 따른 상상혁신센터 협약식이 개최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이날 원광대학교병원에서는 전국 닥터헬기 도입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

16일에는 초중고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이 진행된다. 이원택 도지사가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참여해 스쿨존 내 안전 운전과 불법 주정차 근절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상황도 공개했다. 전북도는 지난 6월 말까지 2분기 주민 만족도 조사를 완료했으며, 주민 150명과 가맹점 70여 곳을 대상으로 생활 서비스 선호도, 이용 불편 사항, 가맹점 매출 변화 및 사업 확대 의견 등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주요 홍보 사업으로 상반기 119 구급 출동 실적 분석 결과도

소개했다. 올해 상반기 구급 출동 건수는 지난해보다 약 5.5% 증가했고, 이송 건수 역시 약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는 응급환자 증가와 지역별 의료 수요 변화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민과 지역 인재 지원 사업도 이어진다. 서울 소재 전북장학사에서는 장수군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사생과 직원 등 약 60명이 참여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전북장학사는 1992년 개관해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도내 우수 인재들의 안정적인 학업과 생활을 지원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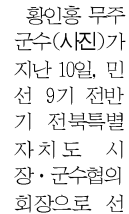
18일에는 무주에서 '세계 식품 문화 엑스포' 개최식이 개최된다.

실 · 국장 주요 일정도 공유했다. 14일에는 '서해안 글로벌 초격차 포럼'이 열려 미래산업, AI 메가 플랫폼, 항공 시스템 등 전북의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16일에는 남원 원예농원에서 복숭아 홍콩 수출 선적식이 열리며, 약 55톤 1억5,000만 원 규모의 수출이 추진된다.

또한 새만금 관련 현안과 관련해 16일 새만금 관할권 관련 4차 변론이 예정되어 전북도 건설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14개 시군 상생 발전 위해 뛰겠다”

황인홍 무주군수, 민선9기 전북시장군수협 회장 선출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10일, 민선 9기 전반이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선출된 황인홍 무주군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 회장으로 임명된다.

황인홍 신임 회장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어두운 현실이 가로막고 있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14개 시군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며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시군 간 협력과 중앙정부와의 소통에 집중할 것”이라며 “민선 9기와 출범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 회는 14개 시군 단체장이 공동의 협약을 논의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로, 이날 임시대회를 열어 전반기 회장을 선출했다.

황인홍 전반기 전북 시장·군수협의 회장은 무주군의 수장(3선)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마을간담회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무주=손홍기 기자

## “소상공인 체감 정책 만들 것”

김동구 도의원, 지역상권 활성화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위원장(군산2)은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강락현)와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강락현 전북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시·군 회장 전북특별자치도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소상공인”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에서 전북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운영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참여 확대 △소상공인 경영인정을 위한 특례보증 공급 규모 확대 △새창업자

와 성실실패자에 대한 금융·행정 지원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건의했다.

특히 연합회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정책지원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연합회의 역할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오늘 제안된 건의사항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게 하는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제도와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략적 대응 필요” | 민주당, 도의회 의장단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전북의 참여와 이익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윤준병)은 10일 도당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박정규 부의장, 염영선 기획행정위원장,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장, 전용태 교육위원장, 한정수에 산별산별위원장 등 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했다.

의장단은 국가 균형발전과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메가프로젝트에서 전북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행정,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를 내 정부와 국회에 전북의 요구를 적극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도당은 도의회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전북자치도와 정치권, 시·군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전북의 포함 여부를 놓고 접근하기보다는 국



10일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원택 도지사와 회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김 전 총리는 도청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도당 제1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행보를 이어갔다.

가 반도체 산업 전체 구상과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전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정부와 기업들이 광주·전남 중심의 반도체 산업 육성 방향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 등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정부 정책 흐름

을 종합적으로 살펴면서 전북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당은 특히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전북의 강점을 바탕으로 정부에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공방보다는 전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북의 입장이 국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도, 실국장·과장급 17명 승진 내정... 조직안정·업무 추진력 강화

실장급에 유희숙 하계울림픽추진단장

국장급에 이민숙·염기남 과장 등 2명

과장급, 행정·기술·농업분야 등 총 15명

전북특별자치도가 10일자로 실장급 1명, 국장급 2명, 과장급 14명 등 총 17명에 대한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퇴직과 휴직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행됐다.

전북자치도는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과 통솔력 업무 수행 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격자를 선발했으며, 특히 조직 내 화합과 일하는 분위기에 기여한 인재를 중심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승진 대상자는 직렬별 전문성과 업

무 성과를 고려해 선정됐다. 실장급에 유희숙 전주하계울림픽추진단장, 국장급에 이민숙 행정정보과장, 염기남 체육정책과장 2명이 승진했다.

과장급 중 행정과에서는 김갑수 회계과 경리팀장, 박태규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장, 손순이 기업유치과 기업유치팀장, 이경순 유치총괄과 유치기획팀장 정행만 농생명정책과 협치농정팀장이 과장급 인사에 포함됐다.

기술·연구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들이 포함됐다. 수의과에서는 유현수 동물방역과 질병관리팀



유희숙



이민숙



염기남

장이 해양수산직에서는 이승철 해양항만과 해양환경정책팀장이 승진 내정됐다. 방송통신직에서는 이희정 행정정보과 사이버보안팀장이 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농업 연구 분야에서는 강찬호 농업기술원 고행자작물시범사업장,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박종숙씨, 농업기술원 원예과 임주락 씨가 승진 내정됐으며, 수의연구직 최은영 동물방역과 펫산

도는 과장급 승진 인사와 관련해 중앙관리처에서 조직 통솔력과 업무 추진 능력은 물론 직무성과 평가 결과, 퇴직 준비 교육 전 잔여 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 인사는 민선 9주기 주요 현안 추진과 조직 내 세대교체 흐름 속에서 실무 역량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재를 전면 배치해 도정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만호 기자

## “고창군청 압수수색... 성역 없는 수사라”

혁신당 도당 “현직 군수가 강제수사 대상... 군민 신뢰 회복해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이 경찰의 고창군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해 심덕섭 고창군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군수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창군청의 최고 책임자인 현직 군수가 강제수사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군민들이 느끼는 충격과 실망은 매우 크다”며 “군정 운영의 신뢰성과 행정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수사기관을 향해 “어떠한 위압이나 성역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뿐 아니라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까지 군민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죄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심덕섭 고창군수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전북도당은 “현직 군수라는 지위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군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창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 신뢰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그동안 제기된 각종 개발사업과 군유재산 처분 과정에서 특혜 의혹 역시 철저하고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부패와 특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며 “어떠한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책임에서 예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까지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추가적인 불법 행위나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군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7일 고창군청 군수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심덕섭 고창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